이형일, 노동시장 이중구조·大-中企 격차 완화 팔 걷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재경부,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경제부총리 팀장으로 TF 발족
지역 간 격차완화반 등 5개 예정
재경부·보건부 공동 총괄반 구성
3대 민생프로젝트 점검·관리 나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 양극화 대응에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선다. 관련 전담반(TF)을 발족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양극화 관련 세부 대응책은, 다음 달 발표될 '2027 경제성장전략(구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을 꾸릴 예정이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고 부처 1급이 참여한다. 작업반 팀장 중심으로 국책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핵심과제 발굴·구체화한다는 게 목표다.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총괄반도 구성된다. 총괄반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거나 TF의 총괄·조율 역할을 맡고 3대 민생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를 점검·관리한다.

매주 작업반별 회의와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처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조율한다. 12월 초까지 부문별 작업반·총괄반 논의를 거친 5대 부문별 추진 방향을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10월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9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를 경신한 것을 언급하고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달 13일 발표한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중동 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표하는 경제전망을 연 3회로 늘린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재초환에 세제 변수까지… 강남3구 매매 관망세

부동산원, 이달 첫주 아파트 매매가
강남·서초 13주, 송파 9주째 내림세
재초환 부담 영향, 매매협의 어려워

서울 강남3구의 고가 신축 아파트에 이어 개포와 잠실의 중소형 아파트까지 집값 조정이 뚜렷하다. 반포현대와 은마 재건축조합에는 잇따라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지됐고,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아파트 매수자는 추가 부담을 감안해, 집주인은 세제 개편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 강남3구 중소형까지 하락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2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9% 내렸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37%, 0.17% 하락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91주 연속 올랐지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13주째, 송파구는 9주째 내림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의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낮은 가격에 계약된 사례는 16건이었다. 하락 거래는 반포의 고가 신축부터 개포·대치의 중소형, 잠실 대단지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함 랩장은 일부 급매 거래에서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매수자는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세금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매도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호가를 낮춘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변수로 떠올랐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기간에 늘어난 주택가액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남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 반포현대·은마 재초환 사전통지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179억원을 사전 통지했다. 2021년 준공한 이 단지에 최종 부과에 앞서 산정액을 알린 것이다. 조합은 이 가운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부과 시한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도 지난달 30일 강남구로부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오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값이다.

재초환 부담은 재건축 단지 매수자의 지불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매수자가 향후 부담금까지 감안해 가격을 낮춰 부르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하락 거래가 성사되는 셈이다. 집주인이 호가를 유지하거나 매수자가 부담금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미룬다면 거래부터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부담금이 조합의 사업 추진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착공과 신축 공급에도 시차를 두고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초환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담금 액수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매매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매도를 서두르는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낮추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금액을 계속 낮춘다고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담금까지 포함한 매입 비용이 명확한 매물을 선호하는 매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 종부세 완화론 솔솔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 일부 집주인은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임대를 이어갈 수 있다.

함 랩장은 "향후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려면 하락거래의 지속성과 거래량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거래량이 회복되고 후속 거래가격이 반등한다면 최근 조정은 일시적인 가격 재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젠슨황 불륜녀 10조 AI반도체 中에 공급 의혹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의 불륜 상대가 약 1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우회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CEO는 불륜 사실을 인정한 지 하루 만에 정상 출근했으나 논란은 엔비디아 해외 유통망 관리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1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사업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젠슨 황 CEO와의 관계를 활용해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 상당의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의혹이 제기된 물량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H100 등 약 24만개에 달한다. 반도체 확보 과정에서는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센추리 리통이 2023년 6월 설립된 지 4개월 만에 엔비디아의 우대 클라우드 협력사로 선정돼 공급 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같은 해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에도 센추리 리통은 유통업체를 통해 반도체를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앨리스 황은 수출제한으로 주문이 지연되자 엔비디아와 유통업체 인맥을 활용해 물량 확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도체 공급에는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활동했던 싱가포르 메가스피드와 말레이시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 등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외신은 이들 기업을 통해 확보한 반도체 일부가 중국에 직접 반입됐다고 보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원전·재생·LNG발전 조화롭게 활용을"

〉〉 1면 '전력 확충·공급망…'서 계속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전 전망에 따르면 국내 최대전력 수요는 2025년 100.9GW에서 2038년 129.3GW로 약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과 AI 확산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와 변전소 확충, 민간 참여형 전력망 공동건설, 가상송전망(VPL) 및 ESS 활용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곽 처장은 "AI·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전력망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며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ESS·인버터 활용을 의무화하는 그리드코드를 마련하고, 전력망과 산업시설의 구축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전력 소비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역시 2040년 최대전력 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26.6GW 증가한 158.4GW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LNG 발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산업팀 책임은 국내 데이터센터 97곳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시설의 78%, 건설·계획 단계 시설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데이터센터 입지를 결정하는데 전력망 접속 여건을 중요하게 생가하는 만큼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 인재 육성, 재생에너지 공급 등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책임은 "전력 조달 다변화와 지역 산업 연계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 사용량, 고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